

동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기념과 집단기억*

박찬승**

〈차 례〉

1. 머리말
2. 동아시아 각국의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의례
3. 아베 담화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
 - 1) 아베 담화에 대한 각국 지식인과 정부의 요망
 - 2) 아베 담화의 내용과 그 검토
 - 3) 각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
4.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과 그 간극
 - 1) 전쟁의 성격에 대한 집단기억
 - 2)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에 대한 인식
 - 3) 난징대학살에 대한 집단기억의 충돌과 조정
5. 맺음말

[국문초록]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기념'행사는 집단기억의 재현이자, 집단기억의 재생산을 위한 의례이다. 중국과 타이완의 승전기념일 행사, 일본의 전몰자 추도식, 한국의 광복절 기념식도 마찬가지로 집단기억의 재현이자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념행사가 그 방향성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8월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을 기념하는 담화를 내놓았다. 그의 담화는 우선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말하였지만, 그 반성과 사죄는 과거형으로서, 그동안 사죄와 반성을 표시해온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을 표명한 것이었다. 또 전쟁시기 일본인들의 희생, 그리고 전쟁 상대국의 희생은 언급하였지만, 한국인으로서 징병, 징용 등에 동원된 이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세계의 평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5)

**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와 번영, 인권 등을 위해 일본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 아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란 실은 군사력의 강화,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대외 영향력의 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아베담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일본 내의 언론과 지식인의 다양한 반응, 그리고 동아시아 각국 정부와 언론, 지식인의 반응은 동아시아인들의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의 차이는 2차대전기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성격, 전쟁책임과 전후책임, 난징대학살 사건의 진상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나라, 그리고 각국 내부의 사회집단 간에는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집단기억에 차이가 있고, 이러한 여러 집단기억들은 서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학자들의 학술교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점점 좁혀 나가고 있기도 하다.

동아시아에서 역사, 특히 전쟁의 기억을 둘러싼 여러 집단 간의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보편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지 않은 담론이나 집단기억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따라서 결국은 인권, 자유, 민주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담론과 집단기억이 보다 우세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주제어] 2차 세계대전 종전70주년, 전쟁기념, 전쟁책임, 집단기억, 아베담화, 난징대학살

1. 머리말

2015년은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종전 70주년을 맞아 주요 전승국인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서는 각기 5월 8일 혹은 9일에 승전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미국은 1948년부터 1975년까지 9월 2일을 승전기념일(Victory Day)로 기념하였으나, 이후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폐지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타이완, 중국, 일본, 한국에서 모두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다. 이들 나라 가운데 특히 승전국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대대적인 열병식을 거행하는 등, 성대한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반면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희생자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와 같은 기념행사들은 바로 '집단기억'의 재현이면서, 동시에 '집단기억'을 형성하기 위한 기제이기도 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70년을 맞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는 과거 일본이 일으킨 전쟁들에 대한 여러 전쟁에 대한 소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 전쟁에 대한 반성, 21세기 일본의 진로에 대한 다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담화의 발표를 전후하여 동아시아 각국 정부와 지식인, 언론인들은 여러 당부와 논평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러한 당부·논평들과 아베 담화에 나타난 역사인식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그러한 간극은 그동안 각국의 여러 정치, 사회적 집단들이 지녀온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각국의 여러 집단들이 지녀온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집단기억은 1)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인식, 2)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집단들의 집단기억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중일전쟁기 난징대학살 문제의 사례를 들어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구체적으로는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각국의 집단기억의 차이는 역사분쟁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역사분쟁의 바탕이 되고 있는 집단기억의 간극은 과연 극복할 수 없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그 극복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말하는 ‘집단기억’이란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말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에서 따온 것이다. 알박스는 한 사회에는 다양한 집단이 있고, 이들 집단들은 각기 놓인 상황에 따라 각각의 ‘집단기억’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기억은 다양한 문화적 매개체들, 예를 들어 책, 영화, 음악, 시각적 표상, 기념물, 기념일, 의례(행사)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¹⁾ 이 글에서는 알박스의 ‘집단기억’의 개념을 차용하여, 동아시아 각국 내부에는 여러 집단들의 ‘집단기억’들이 존재하며, 이들 집단기억은 상호경쟁과 상호갈등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이른바 ‘역사갈등’도 이와 같은 ‘집단기억’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Maurice Halbwachs, *La Mémoire collective* (Albin Michel, 1950); 오경환, 「집단기억과 역사: 집단기억의 역사적 작용」, 『아태쟁점과 연구』 2007년 가을(한양대 아태연구소, 2007), 83~90면 참조.

2. 동아시아 각국의 2차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의례

중화민국(이하 타이완)에서는 1945년 9월 2일 일본군이 미군 미주리함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다음 날인 9월 3일을 ‘군인절’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거행해왔다.²⁾ 그러나 이는 국가기념일보다는 한 단계 낮은 ‘節日’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휴일도 아니다. 이날 각 군에서는 각종 경축행사를 거행하며, 총통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은 國民革命忠烈祠를 방문하여 항일전쟁 중에 순국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는다. 중화민국은 전승 70주년을 맞는 금년 7월 4일에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도단, 항공기 등 신형 무기도 등장하였다.³⁾ 그러나 이들 무기들은 9월 3일 베이징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소박한 것들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축사를 통하여 중국인들의 8년간에 걸친 대일항전은 중화민국 정부가 주도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마 총통은 “역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다. 8년 항정은 중화민국 정부가 주도한 것이다. 항전의 승리는 장개석 위원장이 영도하는 전국 군민(軍民)이 용감하게 분투한 결과였다. 이러한 역사는 누구도 개찬(改竄)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항전승리 및 타이완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승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원망과 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침략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⁴⁾ 마잉주 총통의 이와 같은 연설은 9월 3일로 예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전승절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중국 국민당군이 중심이 되었던 항일전쟁 승전의 공을 중국공산당 측에서 가로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서는 타이완의 9월 3일 항일승전기념일을 국민당의 기념일이라 하여, 9월 3일 대신 8월 15일을 승전기념일로 해왔으며 기념행사도 크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날짜를 9월 3일로 바꾸고 법정 국가기념일인

2) 중국 국민당군이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것은 9월 9일 난징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였다. 중화민국 정부는 본래 8월 14일을 공군절, 12월 12일을 헌병절, 7월 7일을 육군절로 지정하여 기념해왔으나, 1955년에 이를 통합하여 대일항전승리 기념일인 9월 3일을 ‘군인절’로 정하였다. (中華民國的《紀念日及節日實施辦法》)

3) 阿波羅新聞, 2015.7.5.(이하 모든 신문의 날짜는 인터넷판 입력 날짜로 표기함)

4) 中國時報, 「馬英九: 國府主導抗戰 不容竄改扭曲」, 2015.7.4.

‘전승절’로 지정하여 성대한 기념행사를 시작하였다. 수도 베이징만이 아니라, 전국 31개 성과 시, 자치구 등에서도 기념식을 가졌으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⁵⁾ 중국은 또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일(12월 13일)도 2014년에 처음으로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중국이 이와 같이 전승절과 난징학살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타협하거나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⁶⁾ 당시 중국의 한 학자는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보에 대해 “‘항일승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억을 국가와 인민 차원의 ‘집단기억’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한 학자는 “중국은 그동안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항일투쟁 역사를 통해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다시 이를 통해 공산당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즉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⁷⁾

중국은 예고한대로 항일 승전 70주년을 맞는 2015년 9월 3일에 ‘중국인민의 항일 전쟁 및 세계의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 행사를 베이징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하였다. 중국의 열병식은 그동안 14차례 있었는데, 이는 모두 10월 1일 중국 건국일인 國慶節에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한 행사를 전승절에 가진 것은 이 날을 그만큼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날 열병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군 병력 1만2천여 명과 500여 대의 무기 장비, 200여대의 군용기가 총동원되었다. 또 핵전략 미사일로 꼽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풍(東風·DF)-31B’, 쟁(殲)-15를 비롯한 전투기, 공중조기경보기, 무장헬기 등 첨단 무기가 대거 등장하였다. 이날 퍼레이드에 대해 한국의 한 언론은 글로벌 파워를 과시하는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屈起) 쇼’라고 평하였다.⁸⁾

이날 열병식 행사에 국가 정상이 직접 참석한 나라는 한국, 러시아,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몽골, 미얀마, 베트남, 쿠바, 폴란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등의 경

5) 연합뉴스, 「〈중항일전승기념일〉 ①국가기념일 첫 지정…거국적 행사로」, 2014.9.1.

6) 연합뉴스, 「〈중항일전승기념일〉 ②항일전쟁 승리 법제화로 日에 ‘정면대응’」, 2014.9.1.

7) 연합뉴스, 「〈중항일전승기념일〉 ③전문가 “민족의식 고취·체제강화 목적”」, 2014.9.1.

8) 연합뉴스, 「中, 사상 최대규모 열병식 오늘 개최…글로벌 파워 과시」, 2015.9.3.

우는 주중 대사관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주중 대사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⁹⁾ 서방과 유럽 국가의 정상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8월부터 국내외에서 여러 논란이 벌어졌다.

미국과 일본은 은근히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심지어 일본의 우파 신문 산케이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를 ‘사대주의’라고 비난하고, 조선시대의 명성황후에 비유하는 칼럼을 신기도 하였다.¹⁰⁾ 한국 국내에서도 일부 우파들이 “한국전 때 우리에게 충부리를 겨눴던 중국군에게 박수칠 수 있는가”라면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경우에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를 대체로 지지하는 분위기였다. 보수 쪽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중국과의 교역 증진, 북한에 대한 전략에서의 협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¹¹⁾ 중앙일보는 전승절 기념행사에 이어 열병식에도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보다 득이 많을 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¹²⁾ 진보 쪽의 한겨레신문도 “박 대통령이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열병식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대여서 미국과 일본 등의 경계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시야에 넣고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평가하였다.¹³⁾

한편 중국은 전승절 기념행사에 맞추어 과거 전쟁기의 국공합작을 크게 부각시켰다. 중국 정부는 그 일환으로 열병식에 항일전쟁에 참가한 국민당 노병들도 초청해 공산당 출신 노병들과 함께 항전 노병 대오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참여한 국민당 출신 노병들의 평균 나이는 90세였다. 또 중국 각지의 기념관에 국민당 출신 병사들을 항일영웅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국민당군의 노병들에게 1인당 5천 위안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다.¹⁴⁾

또 타이완의 국민당 전 주석인 련잔(連戰)은 전승절을 전후하여 대륙을 방문, 열

9) Voice of America, 「중국 전승절 러시아·한국 등 30개국 정상 참석」, 2015.8.26.

10) 조선일보, 「日 산케이, 박대통령에 망언…‘압살된 명성황후 연상」, 2015.8.31.

11) 조선일보, 「[사설] 中 전승절 참석 후 대미·대일 외교 기반 다져야」, 2015.8.21.

12) 중앙일보, 「[사설] 박 대통령 중국 열병식 참가 … 외교 호기로 삼아야」, 2015.8.28.

13) 한겨레, 「[사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 해법’ 동력 확보해야」, 2015.8.21.

14) 연합뉴스, 「중국, 열병식 맞아 ‘국공합작’ 이례적 부각」, 2015.8.31.

병식에도 참석하였다. 그는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 회담을 하였다. 련잔이 열병식 참석을 발표했을 때, 같은 국민당의 출신의 마잉주 총통은 련잔의 열병식 참석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또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거주하는 국민당 노병들을 초청한 데 대해서도 마잉주는 ‘여행자제’를 당부하고, 중국의 ‘통일 전선’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였다.¹⁵⁾ 마잉주가 련잔의 열병식 참석을 반대한 것은 앞서 본 것처럼 중국이 국민당의 항일전쟁 공적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련잔은 이와 같은 타이완의 여론과 중국측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항전 기간 동안 국민당의 군대는 장제스(蔣介石)의 영도 아래 정면의 전장에서 싸워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고, 중국공산당의 군대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영도 아래 적후(敵後)의 전장에서 싸워 일본군을 견제함으로써 일본군과 만주군을 섬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화민족은 참혹한 대가를 치른 뒤에야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¹⁶⁾

한편 일본은 1982년에 8월 15일을 ‘戰沒者를 追悼하고 平和를 祈願하는 날’로 정하고, 정부 주최로 ‘전국전몰자추도식’을 도쿄의 일본무도관에서 거행해왔으며, 각 지방에서도 자치단체 주최로 추도식을 거행하였다. 2015년 8월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일본 천황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전몰자추도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아키히토 천황은 추도사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서 있었던 大戦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금후 전쟁의 참화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전 국민과 함께 전쟁에서 산화하고 戰禍에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추도의 뜻을 표하고,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가일층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¹⁷⁾ 천황의 ‘大戦에 대한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은 예년보다 더욱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7월 하순 집단자위법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고, 9월 참의원 통과를 모색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8월 14일 ‘아베 담화’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당연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8월 15일이 ‘광복절’ 즉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로서,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다. 정부는 매년 8월 15일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각

15) 연합뉴스, 「대만 총통 “련잔 前주석의 中열병식 참석은 부적절”」, 2015.8.30.

16) 中央社(台北), 「連戰抗戰談話 施明德」, 2015.9.2.

17) 日本經濟新聞, 「戰沒者追悼式 天皇陛下のお言葉」, 2015.8.15.

지방자치단체, 종교계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승절 기념행사 같은 것은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도 8월 15일은 ‘조국광복의 날’로서 8대 국가명절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휴일이다. 8월 15일은 남북한이 유일하게 공유하는 국경일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날 그리 큰 행사가 열리지는 않는다. 북한은 매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갖고, 신형 무기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2015년 동아시아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을 살펴보았다. ‘기념(commemoration)’이란 집단기억의 재현을 통해 공동체의 균질적인 시공간을 창출하고, 공동체적 동시성을 마련하는 상징행위로서, 그 자체가 문화적 생산물인 동시에 재생산을 위한 기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⁸⁾ 즉 ‘기념’행사는 집단기억의 재현이자, 집단기억의 재생산을 위한 의례인 것이다. 타이완의 승전기념일 행사, 일본의 전몰자 추도식, 한국의 광복절 기념식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집단기억의 재현이자 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념행사가 그 방향성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의 차이는 결국 이미 형성되어온, 혹은 앞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집단기억들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아베 담화와 이에 대한 각국의 반응

1) 아베 담화에 대한 각국 지식인과 정부의 요망

2015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일본 총리 ‘아베의 담화’였다. 일본에서는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2005년 고이즈미 총리의 담화에 이은 일본 총리의 종전 기념 세 번째 담화였다. 아베 총리의 담화는 이미 금년 초부터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18) 이화진, 「‘극장국가’로서 제1공화국과 기념의 균열」, 『지역과 전쟁』(휴머니스트, 2009), 227면.

우선 미국 국무부는 2015년 1월 초 아베총리가 예고한 ‘戰後 70주년 담화’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밝혔다.¹⁹⁾ 그러나 아베총리는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1월 25일 NHK 방송에 출연하여 전후 70년을 맞아 발표할 예정인 담화에 무라야마 담화(1995년)와 고이즈미 담화(2005년) 때처럼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의 표현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 써온 문구를 사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베 정권이 (패전) 70주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담화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 담화에 담긴 키워드(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를 반드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²⁰⁾

8월 담화의 발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담화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일본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일본의 학자 74인은 7월 17일 「전후 70년 총리 담화에 대하여」라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에는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타나카 히로시(田中宏),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마쓰모토 산노스케(松本三之介), 아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와타 하루키(和田春樹), 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 가토 요코(加藤陽子) 등 국제정치학, 국제법학, 역사학 분야의 저명한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²¹⁾ 이들은 “중전 후 일본의 부흥과 번영을 가져온 일본 국민의 일관된 노력은 타이완과 조선의 식민지화, 1931년부터 1945년에 걸친 전쟁이 커다란 과오였으며, 이 전쟁이 3백만 명 이상의 일본국민과 그 몇 배에 달하는 중국 및 그 밖의 여러 나라 국민의 희생을 가져왔다는 것을 통렬히 반성하고, 그러한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대한 강한 속죄감과 회한이 전후 일본의 평화와 경제 발전을 지탱해온 원동력이었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전후 70년, 80년, 90년을 거치면서 이러한 생각이 점차 옅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이러한 생각이 바로 전후

19) 한겨레, 「미국 “아베 담화’에 역사 반성 담아야」, 2015.1.6.

20) 한겨레, 「아베, 담화에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 문구 뺀다」, 2015.1.25.

21) 이 성명의 내용에 대해서는 朝日新聞, 「学者ら74人の戦後70年総理談話について’声明全文」, 2015.7.17.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지탱해 온 원점(原點)이며,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성명은 아베의 담화가 이전의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미국 등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앞서의 담화를 구성한 중요한 단어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아베 담화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총리나 국방장관의 담화를 통하여 강조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에 대해 관계되는 여러 나라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성명은 아베 총리가 종종 강조해온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것의 의미를 구체적인 언어표현에 의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아베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종종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해온 것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일본이 1931년부터 45년까지 수행한 전쟁이 국제법상 위법한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 국민으로서의 쓰라린 일이다. 그 시대 선인(先人)들은 현세대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시대의 국민보다도 엄한 시련에 직면하여 심대한 희생을 치렀다. 이러한 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은 후생(後生)인 우리가 가볍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진주만을 공격하고 3백만여의 국민을 희생시키고, 그 몇 배에 달하는 여러 나라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쟁이 끔찍한 과오였다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이 타이완이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통치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역사에서 어떤 나라도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있고, 일본도 또한 이 시기 과오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도의적으로 평가받고, 우리 일본국민이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²²⁾

이들은 전문가로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의 전쟁은 명목이야 어떠했든 간에 그 실질에 있어서 ‘일본에 의한 위법한 침략전쟁’

22) 위와 같음.

이였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역사학에서도 이미 국제적인 평가가 정착된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후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은 일관하여 유지되어 왔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는 압도적 다수의 나라들의 공통된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전후 70년에 걸쳐 일본국민이 쌓아온 일본에 대한 높은 국제적 평가를, 일본이 수행한 앞서의 전쟁을 부정하거나 위법한 성격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무(無)로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성명은 “총리는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의 일본의 역사에 대한 세계의 평가에 깊이 생각하고, 현재와 장래의 일본 국민이 세계의 어디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가슴을 펼치고 ‘이것이 일본 총리의 담화이다’라고 인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담화를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끝을 맺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일본 각지에서 아베 담화에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집회를 가졌다. 7월 29일 도쿄에서는 ‘전후 70년 시민선언 전국보고회-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묻는다’는 집회가 열려, 아베 총리가 새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것을 촉구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아베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의 표현을 넣는 것에 부정적이다. 아베 총리가 일본이 행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행할 것을 촉구하며, 또 이런 역사인식을 젊은 세대가 계승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²³⁾

한편 7월 29일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의 지식인 500여명은 광복 70년-한일협정 50년을 맞아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지식인 공동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아베 담화의 발표를 앞두고 “과거는 공개하고, 사죄하고, 용서하여 극복되는 것이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는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출발점 삼아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하는 담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동아시아의 과거사를 둘러싼 충돌이 민족주의 충돌로 이어지고 영토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거 회귀는 전쟁 위기와 안보 불안으로 확대되고 각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성명은 “과거를 덮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장은 허구이며,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과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침략

23) 한겨레, 『한·일·세계 지식인 524명 “아베 담화, 식민지배 사죄 담아야”』, 2015.7.30.

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고은 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 한국 지식인 382명,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우쓰미 아이코 와세다대 교수 등 일본 지식인 105명, 알렉시스 더튼 코네티컷대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등 미국 지식인 22명, 유럽 지식인 15명 등 524명이 참여했다.²⁴⁾

또 8월 10일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중견 학자 7백여 명은 따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식민지 지배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해야 할 적기에 양국관계는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이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성명은 “일본 정부는 청일전쟁에서 시작된 침략전쟁의 50년사를 인정하고 전쟁과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아시아 민중들에게 자행한 학살과 박해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²⁵⁾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8월 3일 일본 민주당 오카다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담화는 “역대 담화의 역사 인식을 확실하게 재확인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미래로 향하는 데 큰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²⁶⁾ 중국 외교부도 8월 7일 화춘잉(華春瑩)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아베 담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전쟁의 성격과 전쟁의 책임 문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면서, “올해는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이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는 일본 지도자가 발표할 관련 담화(아베 담화)를 고도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²⁷⁾

24) 위와 같음.

25) 연합뉴스, 「아베담화 앞두고 한국 학자 700명 “진정한 사죄” 촉구」, 2015.8.10.

26) 조선닷컴, 「박 대통령, “아베 담화, 역대 담화 역사 인식 확실히 재확인해야”」, 2015.8.3.

27) 조선닷컴, 「중국 “아베 담화, 아시아 신뢰 얻을 수 있는 기회…전쟁 책임 명확히 하라” 사죄 촉구」, 2015.8.8.

2) 아베 담화의 내용과 그 검토

드디어 8월 14일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가 발표되었다.²⁸⁾ 이 담화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종전 70년을 맞아 지난 (세계)대전으로 향한 길과 전후 우리가 걸어온 길, 20세기라는 시대를 우리는 조용히 되새기며, 그 역사의 교훈 속에서 미래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아베 총리는 백년 이전에 서양 각국을 중심으로 광대한 식민지가 확대되었고, 그러한 식민지배의 위기감이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입헌정치를 하고 독립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러일 전쟁은 식민지 지배 아래 있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는 러일전쟁이 한국의 병합과 만주에서의 이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증명할 수 없는 말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러일전쟁관은 후소사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나오던 것인데, 아베 총리는 같은 맥락으로 말하였던 것이다. 이 문장에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 식민지배 등의 용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담화는 이어서 1차 세계 대전 이후 평화의 조류에 일본도 발을 맞추었지만, 세계 공황, 경제 블록화로 인해 일본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일본은 이러한 난국을 힘을 통해 해결하려 하였고, 국제정세를 보는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였다. 이후 일본은 만주사변, 국제연맹 탈퇴, 그리고 전쟁으로 치달아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만주사변’의 용어는 등장하지만, ‘중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의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또 이 문장에는 ‘침략 전쟁’이라는 표현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결국 이 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라는 말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담화는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에 대한 애도의 뜻만을 밝혔다. 담화는 먼저 전쟁에서 300만여 명의 일본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각지의 전장에서 산화한 이들, 종전 후 이국땅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간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도쿄 등 각 도시의 폭격,

28) 담화 전문은 한겨레, 「〈전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후 70주년 담화」, 2015.8.14를 참조.

오키나와의 지상전에서 많은 이들이 비참하게 희생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전쟁에서의 상대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희생되었으며, 무고한 민초들도 고통을 받고 희생되었고, “전쟁의 그늘에서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받은 여성들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문장은 일본인들의 희생, 그리고 전쟁 상대국의 희생은 언급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징병, 징용 등에 동원된 이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담화는 또 “아무런 죄도 없는 여러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우리가 졌다는 사실, 역사란 실로 되돌릴 수 없는 가혹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본이라는 나라인지, 일본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불명확하다. 이 짧은 문장은 담화 전체에서 유일하게 ‘피해와 고통’을 준 ‘가해’의 책임을 언급한 부분이지만, 그 가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문장은 이어서 “이토록 많은 고귀한 희생 위에 지금의 평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전후 일본의 원점이다”라고 말하였다. 전쟁에서의 ‘고귀한 희생’ 위에 평화가 만들어 졌다는 것으로, 이는 희생된 이들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식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전장에 나간 이들의 죽음은 고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전장에 나간 이들의 죽음은 고귀한 것이 되기 어렵다. 또 침략의 대가로 돌아온 폭격과 원폭으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도 역시 고귀한 것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한 죽음은 사실은 ‘무의미한 희생’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국민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침략전쟁과 같은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다.²⁹⁾

담화는 이어서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에서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시해 왔다. 그런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보이려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타이완, 한국, 중국 등 이웃 아시아 사람들이 걸었던 고난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전후 일관해서 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력을 다했다. 이와 같은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문장에서 처음으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나 그 반성과 사죄는 과거형이었다. 그러한 사죄와 반성을 표시해온 과거 내각의 입장은 “앞으

29) 이들의 죽음의 ‘무의미성’에 대해서는 이안 부투마,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정용환 옮김(한겨레신문사, 1994), 275~276면 참조.

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라고만 말하였던 것이다.

이후 담화는 전후 일본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일본인들과 그러한 일본인들을 관용의 마음으로 도와준 나라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선 전후 태어난 세대가 바야흐로 인구의 80%를 넘었다.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자손 그리고 뒷 세대의 자손에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우게 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인은 세대를 넘어 과거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 문장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전쟁의 문제로 계속 사죄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일본인은 세대를 넘어 과거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어,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 또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문구일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일본이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사죄를 언급해야만 했던 것은 거꾸로 말하면, 일본의 전쟁에 대한 가해 책임의 인정, 그리고 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실천적인 행동이 그만큼 미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미흡함’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일본의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계속해서 요구해왔고, 일본은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그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는 다시 사과를 요구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온 것이다. 이 담화는 그러한 전후 맥락을 놓치고 있다.

담화의 이후 문장들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인권 등을 위해 일본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세기 전사 하의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를 가슴 깊이 계속 새기고 일본이 이러한 여성들이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지 않는 세기가 되도록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라고 한 문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등의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또 일본의 국가책임 문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이 담화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확고히 견지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잡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어느 때보다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과는 손을 잡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입장으로 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란 무엇일까.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안보 이념으로 줄곧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위대 해의 파병 및 집단적 자위권 발동 등을 이 슬로건을 내세워 밀어붙여왔다.³⁰⁾ 아베는 그 즈음 안보 법제를 개정을 주장하면서 “(세계) 평화를 만드는 작업에 있어 일본도 일단(의 의무를) 담당하는 게 무력행사의 목적”이라고 말하였다. 즉 그가 평소에 말해오던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구호 아래 후방지원, 즉 병참을 통해 미국 등 우호국이 ‘평화의 적’을 징벌하는 전쟁에 참가해 지구상 어디라도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³¹⁾ 즉 ‘적극적 평화주의’란 실제로는 군사력의 강화,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대외 영향력의 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아베총리의 담화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말하였지만 그 반성과 사죄는 과거형으로서, 그동안 사죄와 반성을 표시해온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을 표명한 것이었다. 또 전쟁기 일본인들의 희생, 그리고 전쟁 상대국의 희생은 언급하였지만, 한국인으로서 징병, 징용 등에 동원된 이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 인권 등을 위해 일본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 아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란 실은 군사력의 강화,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대외 영향력의 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향후 일본의 진로에 대해 우려를 낳는 것이었다.

3) 각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

그러면 이와 같은 아베 담화에 대해 일본 국내와 아시아 각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먼저 일본 보수우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은 사실에 해당하는 <주장>란의 제목을 「전후 70년 담화, 세계 공헌이야말로 일본의 길이다. 사죄

30) 조선닷컴, 「아베의 ‘적극적 평화’와 진짜 ‘적극적 평화’… 그 차이를 아십니까」, 2015.8.24.

31) 한겨레, 「야미구치 지로, [세계의 창] 안보법제와 전후 일본의 총괄」, 2015.6.21.

외교의 연쇄를 단절하자」라고 달았다.³²⁾ 이 사실은 “전후 태어난 국민이 인구의 8할을 넘는다. 과거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해도, 사죄를 계속해서 강요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보인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 사실은 ‘적극적 평화주의의 관철’이라는 소제목 아래, “전후의 일본은 서방측의 국제질서와 일미동맹에 의한 안전보장 아래 경제력을 기르고, 개발도상국에의 정부개발원조(ODA) 등 경제협력에 의하여 국제질서를 지지해왔다. 현재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라는 국제질서의 물줄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목표로 하는 나라들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 하에서 담화가 일본을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위치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는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새로운 안전보장 법제의 실현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사실은 이어서 아베담화가 앞서의 대전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느낌을 표명하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사실은 “무라야마의 담화는 과거의 역사를 일방적으로 단죄하고, 거둬들이는 사죄와 끝이 나지 않는 보상청구의 요인이 되는 등 국익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아베 총리는 본래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을 지향하였으나 공명당과 자민당 내 일부의 반대에 부딪쳐 선택지가 좁아졌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담화를 계기로 사죄외교를 단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실은 “역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사죄하면 국내에서 반발이 생기고, 다시 상대국의 불신을 고조시킨다. 그 결과 더 큰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사죄외교의 구도”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한국은 금후 역사문제를 카드로 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담화의 표현을 소재로 하여 일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는 허용할 수도 없고, 응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중국과 한국은 (종전) 70년을 맞아 일본의 전쟁책임 등을 추궁하는 역사전쟁을 전개해왔다. 곡해에 기초한 공격도 주저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반론과 사실(史實)의 발신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 진보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사실은 정반대의

32) 産経新聞, 「戦後70年談話 世界貢献こそ日本の道だ 謝罪外交の連鎖を断ち切れ」, 2015.8.15.

입장에서 아베의 담화에 대해 비판하였다.³³⁾ 이 신문은 사설의 제목을 「전후 70년 아베담화, 무엇을 위해 냈는가」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사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담화였는가”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 반성 및 사죄, 아베 담화에는 분명히 국제적으로 주목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를 하였다는 주어가 빠졌다. 반성이나 사죄는 역대 내각이 표명하였다고 하여 간접적으로만 다루었다.”면서, “이 담화는 나올 필요가 없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

이 사설은 아베 담화가 침략의 책임이나 사죄의 의사가 애매한 담화를 내놓았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무리야마 담화로부터 분명히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사죄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아베씨가 여기에서 깨끗이 사죄하고, 국민과 아시아 제 국민 사이에 가로놓인 마이너스의 연쇄를 단절한다는 결심”을 해야 했다고 비판하였다. 이 사설은 결론 부분에서 “낼 필요가 없는 담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쟁의 참화를 체험한 일본 국민이나 근린 제국 국민들이 고령화하는 가운데 해결이 급한 문제는 담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 중국 정부나 중국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선 중국 정부는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며 아베 담화를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전쟁은 중국과 아시아 피해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재난을 가져왔다”며 “일본은 마땅히 침략의 성격과 책임에 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피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철저히 군국주의 침략역사와도 결별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³⁴⁾

한편 중국의 신화통신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담화에 이전 정부의 사과들을 언급하면서 주변 국가들과 화해를 위한 조치를 취하길 희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기껏해야 희석된 것이며 이웃국가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절름발이 출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담화는 1995년 일본이 저지른 전쟁을 용감하고 정직하게 인정했던 무리야마 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며 ‘사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식의 수사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 통신은 “아베의 불순한 사과는 이웃과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경계감을 낮추기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³⁵⁾

33) 朝日新聞, 「(社説)戦後70年の安倍談話 何のために出したのか」, 2015.8.15.

34) 한겨레, 「미, 아베 담화 “환영”…중 “진정한 사과 하라” 비판」, 2015.8.16.

중국의 인민일보는 “아베담화에 침략, 식민통치, 반성, 사죄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이 이 담화에는 성의가 부족하고, 애매한 태도가 담겨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 신문은 근년에 일본정부가 역사 교과서 수정 지침, 난징대학살 죄행의 약화 시도, 위안부 강제징발에 대한 부인 등에서 보여준 태도는 흑백을 전복하고, 시비를 혼효시키고, 국제법을 공공연히 멸시하고, 자국민의 인식을 오도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 신문은 아베 담화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³⁶⁾

그러면 타이완 정부와 타이완 신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타이완 정부 대변인은 “마잉주 총통은 일본정부가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아울러 통절히 반성하고 교훈을 명심하기를 기대한다. 또 미래를 바라보는 사유와 책임 있는 태도로써 주변 국가들과 함께 발전과 우호, 협력 관계를 가져나가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논평하였다.³⁷⁾ 마잉주 총통은 15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항일전쟁 승리 및 타이완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에서 “아베 총리가 침략으로 고통 받은 이웃국가들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담화를 발표했지만 전임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발언했다.”고 평가한 뒤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고 보다 진정성을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타이완 외교부는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과거 행동을 반성하기 바란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두 아베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관련 담화를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필리핀 대통령궁 부대변인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담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³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인도 아베 담화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준 고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역사에 관한 과거 일본 정부의 담화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변인은 또 “앞으로 국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35) 경향신문, 「중국 반응 “회석된 사과… 절름발이 출발일 뿐”」, 2015.8.14.

36) 人民日報, 「人民日報钟声: 日本政府应对人民负责」, 2015.8.17.

37) 中國時報, 「日本對二戰道歉 馬英九: 記取教訓」, 2015.8.14.

38) 서울신문, 「대만 “日, 역사 직시”... 美·필리핀·인도네시아 “긍정적” ‘아베 담화’ 각국 정부 입장」, 2015.8.17.

기여를 확대해가겠다는 아베 총리의 확언을 증시한다.”며 “일본은 70년 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줬다.”고 말했다.³⁹⁾

그러나 미국 언론의 반응은 달랐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2차 대전 중 행위로 숨진 모든 희생자에 대한 가책을 표시했지만, 전임 총리들의 사과를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표현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여성들에게 일본 제국 군대의 성노예를 강요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고 썼다. 영국의 가디언도 “아베 총리가 ‘통석의 염’, ‘영원히 애통한 심장’을 표명했지만, 새로운 사죄에 못 미치고 미래 세대는 사죄하도록 운명이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웃 나라들을 분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디언은 아베 담화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⁴⁰⁾

그러면 한국 정부와 한국 신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날 발표된 아베담화에 대해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역사는 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산 증인들의 증언으로 살아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공언을 일관되고 성의 있는 행동으로 뒷받침해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준 점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을 근간으로 한 역대 내각의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점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베 담화에 대해 아쉽다고 하면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보고자 한 것이다.⁴¹⁾

그러나 한국의 언론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보수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의 표현을 가져다 쓰면서도 교묘한 방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피하려고 한 흔적이 담화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설은 아베담화는 “일본 정부는 앞선 대전(大戰)에서 한 일에 대해 반복해 통절한 반성과

39) 한겨레, 「미국, 아베 담화 ‘환영’…“일본은 모든 국가의 모델”」, 2015.8.16.

40) 한겨레, 「중국 언론 “아베, 몰타기 사죄…무라야마 담화서 후퇴”, 각국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 2015.8.14.

41) 중앙일보, 「[뉴스분석 8·15 경축사] 과거형 담화 vs 미래형 축사」, 2015.8.17.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심정을 표명해왔다.”며 “이런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릴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마치 남의 입을 빌려 반성·사과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아베 담화가 반성·사죄하는 대상은 대부분 중국·미국을 상대로 전개한 만주 침략과 2차 대전과 관련된 일들이었으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합리화하려는 듯한 설명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1905년 러일전쟁 승리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까지 했는데, 이는 일본의 불법 합병 이후 36년간 식민지 억압 아래 있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담화는 또 ‘전쟁의 고통을 맞본 중국인’과 ‘미국·영국·호주·네덜란드의 포로’를 지목해 명시적으로 사과했지만, “식민지 압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문으로 죽고 수십만 명이 강제 징용, 강제 이주(移住)의 고통을 겪었던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베 담화가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신경을 쓰면서 한국과의 관계에는 그다지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이 사실은 지적했다.⁴²⁾

역시 보수계열의 신문인 중앙일보도 사실을 통해 “어제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도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그는 종전 50주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의 4개 키워드인 침략, 식민지배, 반성, 사죄 등을 언급했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하는 사죄인지 잘 알 수 없게 두루뭉수리로 넘어갔다.”면서, “마음을 담은 진정한 사죄와 반성으로 보기엔 뭔가 부족하다. 국제사회의 눈총을 의식해 마지못해 내놓은 담화라는 인상이 짙다.”고 비판했다.⁴³⁾

진보측의 한겨레신문은 일단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 사죄한다고 밝힌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및 2005년 고이즈미 담화와 같이 가해 주체와 피해 객체를 명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장황한 담화 곳곳에 이런 표현을 마치 보물찾기 놀이에서 보물을 숨기듯 분산 배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역대 내각이 표명한 ‘침략, 식민 지배, 사죄, 반성’이란 핵심 단어를 빼놓지 않고 집어넣은 모양새를 취했다.”면서 부분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비록 담화문에 침략, 식민 지배, 사

42) 조선일보, 『[사설] 교묘한 말로 '식민지 지배 사죄' 피해간 아베 談話』, 2015.8.15.

43) 중앙일보, 『광복·분단 70년 ...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 2015.8.15.

죄, 반성이라는 단어를 다 집어넣기는 했지만, 간접화법을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역사 서술 가운데 추상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교묘한 언술을 사용한 것은 역대 내각의 패전 담화에서 후퇴한 것일 뿐 아니라 품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 “위안부 문제를 지칭하는 듯한 표현을 반복하면서도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얼버무린 것도 일본 정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서 한참 뒤로 물러선 것”이라면서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끌어내느냐는 우리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⁴⁾ 이 사실은 비판적이긴 하지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사실보다는 비판의 강도가 약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베담화와 이에 대한 일본 내의 반응, 그리고 각국 정부와 언론의 반응은 동아시아인들의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둘러싼 인식 차이와, 오늘날 각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 방식, 특히 집단기억의 차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의 장에서 살펴본 종전 70주년 기념행사와 마찬가지로 아베담화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다양한 반응 역시 집단기억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4.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과 그 간극

앞서 본 것처럼 모리스 알박스는 한 집단이 상징적 기호와 행위를 통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수한 기억을 형성하는 것을 ‘집단기억’이라고 불렀다.⁴⁵⁾ 이에 대해 최호근은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사실은 동질적 집단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민족이나 국민과 같은 거대집단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둘러싸고 상이한 기억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흔히 집단

44) 한겨레, 『[사설] 패전 70년 ‘아베 담화’, 최악은 피했으나』, 2015.8.14.

45) 전진성, 『역사와 기억: ‘기억의 타’에 대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 『서양사론』 72(서양사학회, 2002), 170면.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배적인 기억을 주로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대항기억들(counter-memories)들이 무수히 존재한다고 말한다.⁴⁶⁾

일반적으로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은 역사가의 저서와 논문, 생존자의 증언, 박물관, 기념행사, 각종 매체와 문학 및 예술 작품, 그리고 역사교과서 등에 의해 형성된다.⁴⁷⁾ 독일의 문화과학자 안 이스만과 알라이다 이스만 부부는 집단기억의 형성에 문학작품을 비롯한 각종 텍스트, 신화와 종교적 제의, 기념물 및 기념장소, 아카이브 등 다양한 문화적 매체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했다.⁴⁸⁾ 즉 집단기억은 문화에 의해 형성되고 재생산되며, 또 문화는 집단기억의 재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호근은 이러한 집단기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고 본다. 또 상호 경쟁적인 여러 기억들이 공존장에서 서로 투쟁하면서 지배적인 집단기억을 만들어 간다고 본다. 아울러 그는 집단기억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20세기 후반 이후 모든 분야의 세계화 추세가 진행되면서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집단기억은 자기주장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⁴⁹⁾ 즉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을 갖지 못한 집단기억은 점차 사라져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근대 이후의 여러 전쟁에 대한 각 나라나 사회집단의 집단기억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보편타당성을 지닌 기억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인들은 과거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과거 전쟁에 대한 기억 방식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수렴되어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오늘날 전쟁에 대한 기억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대단히 많으나, 이 가운데 1)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인식, 2) 전쟁책임과 전후책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 3) 난징대학살의 진상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이슈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⁵⁰⁾

46) 최호근, 『독일과 일본의 2차대전 기억문화』, 『기억과 전쟁』(휴머니스트, 2009), 187면.

47) 이재원, 『프랑스 역사교과서의 1,2차 대전과 식민지 전쟁의 기억과 전수』, 『기억과 전쟁』(휴머니스트, 2009), 95면.

48)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휴머니스트, 2005), 23~29면.

49) 최호근, 앞의 글, 188~189면.

50)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커다란 이슈라 할 수 있으나, 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전쟁기 여성인권에 관한 문제로 보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아니하였다.

1) 전쟁의 성격에 대한 집단기억

먼저 근대 이후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은 침략전쟁인가.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모두를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1) 이들 전쟁을 모두 침략전쟁으로 보는 견해, 2)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제외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만 침략전쟁으로 보는 견해, 3) 모든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보지 않는 견해 등,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역사학계의 다수 의견은 첫 번째 견해에 해당한다. 종전 이후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일본의 ‘미숙한 독점자본주의’ 혹은 ‘조숙한 제국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 지배를 둘러싼 침략적-제국주의의 요소를 지닌 전쟁이었다고 보아왔다.⁵¹⁾

그런데 1969년부터 1972년 사이에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가 쓴 소설 『언덕 위의 구름(坂の上の雲)』이라는 소설(전6권)이 나왔다. 이 소설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특히 러일전쟁을 ‘조국방위전쟁’으로 묘사함으로써, 역사학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소설은 대중들의 러일전쟁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소설은 또 일본공영방송 NHK에서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드라마로 만들어져 방영됨으로써, 대중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⁵²⁾

그런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른바 ‘자유주의사관연구회’가 나오고, 이들은 2001년 후소샤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이 교과서에서 세 번째 견해, 즉 청일전쟁과 러일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후지오카 노부카스(藤岡信勝) 등 이 책의 저자들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일본의 안정보장을 확립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썼다. 이들은 심지어 “유색 인종의 나라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대국이었던 백인제국 러시아에 이겼다는 것은 세계의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독립에 대한 한없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쓰기도 했다(앞서 본 것처럼 2015년 아베담화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 후소샤 교과서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대해 만주에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든가, 블록 경제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든가, 경제봉쇄로 일본이 곤

51) 成田龍一, 『近現代日本史』(中公新書 2150)(中央公論新社, 2012), 160면.

52) 같은 책, 173~174면.

궁에 빠졌기 때문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들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아시아태평양전쟁 초기에 일본이 승리한 것은 “동남아시아 사람들,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독립의 꿈과 용기를 북돋웠다”고 썼다. 이른바 ‘자유주의사관’은 오늘날 일본 학계에서는 ‘역사수정주의’로 불리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아시아태평양전쟁(그들은 이를 ‘대동아전쟁’으로 부른다)이 ‘아시아해방전쟁’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에는 이미 상당수의 보수우익 정치가, 관료, 지식인, 문화인이 동조하고 있다. 과거 일본 국민들 가운데 이 전쟁이 ‘침략전쟁’ 내지는 ‘침략적 성격의 전쟁’이었다고 보는 이들이 6~7할로 우세했다고 하지만,⁵³⁾ 2013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는 응답이 33%, 침략전쟁이었다는 응답이 45%로 상당히 비슷해졌다.⁵⁴⁾ 앞으로 보수우파가 계속 집권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수화가 진행된다면 이 비율은 역전될 수도 있다. 전쟁의 성격에 대한 서로 다른 집단기억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세라고 할 수 있고, 향후 보수우파의 집단기억이 보다 우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수우파의 ‘아시아해방전쟁론’은 당시의 사료와 명백히 배치된다. 예를 들어, 일본군의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침공에 앞서 대본영정부연락회의에서 결정한 『남방점령지행정실시요령』은 “점령지에 대해서는 우선 군정을 실시하고, 치안의 회복, 중요 국책자원의 급속 획득 및 작전군의 자급자족” 등을 들면서, 보크사이트, 주석, 석유, 고무, 텅스텐 등 중요 전략자원의 획득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명언하였다. 반면에 “원주민에 대해서는 황군에 대한 신뢰를 조장하도록 지도하고, 독립운동은 너무 일찍 유도하는 것을 피할 것” 등을 지시하였다.⁵⁵⁾ 따라서 ‘아시아해방전쟁론’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이와 같은 이론은 결국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53) 額瀨厚(고케츠 아츠시), 『私たちの戦争責任』(凱風社, 2009), 130~147면.

54) 朝日新聞, 2013년 12월 29일[박명희,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과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기회구조-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19권 제2호(통권 제37호)(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4), 50면 참조.]

55) 額瀨厚, 앞의 책, 147면.

2)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에 대한 인식

전쟁의 책임 문제 또한 뜨거운 이슈이다. 전쟁의 책임이란 물론 전쟁을 도발한 책임을 말한다.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은 당연히 일본에게 전쟁 도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후 일본인들도 이들 전쟁의 도발 책임은 일본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책임은 일본 군부에게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중전 직후에는 히가시쿠니 나루히코(東久邇稔彦) 총리가 패전의 원인으로서 戰力の 급속한 괴멸, 전쟁의 참화, 원자폭탄, 소련 참전, 과도한 전시통제, 국민도회의 저하 등을 들면서 군·관·민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는 ‘1억 총참회’론을 내놓았지만, 곧 미국의 국력을 숨긴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지도자들의 책임론이 더 강해졌다. 또 미 점령군이 전범을 체포하기 시작하면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⁵⁶⁾ 결국 이후 진행된 ‘동경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지목되어 처형된 이들은 전쟁 도발의 책임과 패전의 책임을 지고 세상을 떠났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그러한 전쟁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일반 국민은 오히려 자신들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가졌다. 최근에도 학자들이나 매스컴에서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은 모두 ‘군부(특히 육군)의 폭주’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견해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다.⁵⁷⁾

후지와라 기이치는 이와 같이 전쟁의 책임을 ‘일부의 군부’에 돌려버리고 이들을 ‘국민’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들은 그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민간인뿐만 아니라 전쟁에 동원된 이들도 군부가 자신들을 ‘무모한 전쟁’으로 이끌었고, 자신들은 그 희생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⁵⁸⁾ 여기서 전

56) 타나가 히로시 외 지음, 『기억과 망각』, 이규수 옮김(삼인, 2000), 119~121면.

57) 일본 NHK에서는 2011년 「일본인은 왜 전쟁으로 나아갔는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방송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거대조직 육군 폭주의 메커니즘’이었다. 이 프로그램 나간 이후 방송국에는 천 건 이상의 전화가 걸려와 바로 자신들이 구하고 있던 태평양전쟁의 관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머지 프로들은 ‘세계의 흐름을 잘못 읽은 외교’, ‘대중들에 영합한 미디어’, ‘잘못된 개전 결정을 한 지도자들’이었다. 이 시리즈는 뒤에 같은 제목의 책으로 엮여져 나왔는데, 이 책에서 도베 료이치 교수는 ‘육군폭주의 연쇄’라는 글을 썼다. NHK取材班編著, 『日本人はなぜ戦争へと向かったのか』 上・下(NHK出版, 2011) 참조.

쟁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반핵, 평화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히로시마였다. 히로시마가 그러한 상징으로 떠오른 것은 1950년대 중반이었다. 1954년 비키니섬 환초에서 있었던 미국의 수폭실험과 그에 따른 제5후쿠류마루의 피폭 사건이 있는 후, 일본 도쿄에서는 반핵 평화운동이 시작되었다. 그해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정비 구상에 따라 1955년 평화기념자료관이 세워졌다. 이후 원폭의 비참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선전하는 시설이 되었다. 히로시마에서는 매년 8월 6일 희생자 추모식이 열리며, 이에 총리도 참석한다.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희생자,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서의 공습 희생자 추도식 등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일본인은 피해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데 기여했다.⁵⁹⁾ 때문에 일본인 스스로가 가해자였다는 의식은 점점 열어져갔다. 또 전범으로 지목되었다가 풀려난 이들이 공직에 속속 복귀하면서, 전쟁에 대한 책임의식은 거의 사라져갔다.⁶⁰⁾

이에 1947년 이후 동서냉전이 심화되어 가면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 놓이게 되고,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원조를 받으면서 민중의 일본에 대한 불만을 억압하였던 사실도 크게 작용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장기에 걸친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계속되면서 일본의 식민통치를 비판한다든가 보상을 청구한다든가 하는 목소리는 억압을 받았던 것이다. 일본은 차관 등을 통해 한국의 이러한 정권들을 지원했다. 타이완을 비롯한 동남아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들 나라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냉전이 종언을 고한 1990년대 초 이후였다.⁶¹⁾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1971년 혼다 가쓰이치(本多勝一) 기자가 『중국여행』이라는 기사를 아사히신문에 게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혼다 기자는 이 기사에서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날날이 폭로했다. 이후 일본인은 가해자로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시각과, 일본인은 결코 가해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충돌하였다. 여기에서 전후 처음으로 ‘전쟁책임론’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여 이를 ‘자학

58) 후지와라 기이치, 『전쟁을 기억한다』, 이숙중 옮김(일조각, 2003), 115~117면.

59) 같은 책, 122~125면.

60) 동북아역사재단편, 『무리아비총리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생각한다』(동북아역사재단, 2015), 46면.

61) 綱縑厚, 앞의 책, 135~136면.

사관'이니 '도쿄재판사관'이니 하면서 비판하는 시각도 대두하였다.⁶²⁾

오늘날 전쟁책임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고케츠 아즈시(纈纈厚)는 일본의 전쟁 책임이란 “일본이 침략전쟁이니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심대한 피해와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일본은 사죄나 보상을 실행하여 적극적으로 화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전쟁책임의 주체는 누구일까. 그는 “첫째로 침략전쟁을 지도한 천황과 전전기(戰前期) 천황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한 군부, 관료, 정치가, 천황측근 그룹이며, 나아가 이를 외부에서 지탱한 우익단체, 종교단체, 학계, 노동조합 등의 조직이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전쟁을 지지한 개인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책임의 무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천황제를 안으로부터 지탱한 권력엘리트와, 천황제의 관리, 통제, 동원의 대상으로 되어 스스로 정치적 제 권리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던 일반 민중에게 같은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 당연히 권력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책임의 질과 크기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⁶³⁾

전쟁책임론은 ‘전후책임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후책임이란 전후세대의 전쟁 책임을 말한다. 고케츠 아즈시는 랄프 지오르다노(Ralph Giordano)의 『제2의 죄』라는 책을 인용하여 이를 설명한다. 지오르다노는 히틀러의 제3제국 시대에 독일인이 범한 전쟁범죄를 ‘제1의 죄’라고 한다면, 전후의 독일인이 의식했건 안 했건 ‘제1의 죄’를 묵인, 은폐, 왜곡, 부정하려는 행위는 ‘제2의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독일인의 전후책임을 논하였다. 고케츠는 이를 일본에 적용시켜, 전후에 일본인은 동서 냉전구조에 규정되어 과거의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즉 일본의 침략의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일본에 의해 침략을 받은 나라의 사람들이 더욱 더 일본을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난징학살사건, 싱가포르학살사건 등은 모두 망각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베리아억류 등은 강하게 집단 기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전후세대는 망각과 기억을 적절히 구사하여 역사를 자기마음대로 구축해온 것이 아닌가 하고 그는 묻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은폐나 과거의 망각을 고발하는 것이야말로 전후세대가 전쟁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62) 후지와라 기이치, 앞의 책, 126면.

63) 纈纈厚, 앞의 책, 135~136면.

고 주장한다.⁶⁴⁾

다카하시 테츠야(高橋哲哉)도 전후세대인 일본 국민은 침략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쟁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전후 일본 국가에게 ‘전후책임’을 완수하게 만들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가의 정치적 주권자로서 이 책임은 법적으로 ‘국민’인 모든 사람이 원칙상 평등하게 지는 것이며, 법적으로 국민인 한, 이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⁶⁵⁾

이와 같이 일본 사회 내에서는 전쟁책임론, 전후책임론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사람들의 경우, 아직도 일본인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강하고, 가해자라는 의식은 약하다. 더욱이 2000년대 이후 일본 사회의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⁶⁶⁾ 이 때문에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의 전쟁에 대한 의식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3) 난징대학살에 대한 집단기억의 충돌과 조정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정부는 특히 난징대학살(일본에서는 ‘난징사건’이라고 부른다) 부분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중국 정부의 지도자 덩샤오핑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전국에 일본의 중국 침략의 기념관과 기념비를 건립하여 대중에게 그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83년 중국 공산당 장쑤성위원회와 장쑤성 정부는 난징대학살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덩샤오핑은 1985년 2월 난징을 방문하여 공사 중인 기념관의 이름을 『侵華日軍南京大屠殺遇難同胞紀念館』이라 지어주었다. 그리하여 그해 8월 15일 이 기념관은 개관을 보게 되었다. 또 중국 정부는 당시 생존자들을 찾아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체험을 말하도록 했다. 그 이전까지 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을

64) 같은 책, 191~192면.

65) 다카하시 테츠야 지음, 『역사/수정주의』, 김성혜 옮김(푸른역사, 2015), 25면(일본판은 2000년 岩波書店에서 출간됨).

66) 스키치 유코 지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이성순·한예린 옮김(나남, 2015), 5면.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⁶⁷⁾ 그런데 1985년에 지어진 기념관은 협소한 편이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새 자료관을 지어 2007년 12월 13일 개관하였다. 또 12월 13일을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일로 지정하였다.

또 중국 정부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맞아 루거우차우(盧溝橋) 곁에 있는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1987년 개관)의 각종 전시실과 기념관 주변 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뒤 2015년 7월 7일 ‘7·7사변(루거우차우(盧溝橋) 사건) 78주년을 기해 재개관했다. 중국은 이 개관에 맞추어 2차대전 당시 중국은 일본군 240만 명을 중국 전선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였으며, 3,5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를 났으로써 이는 소련의 2,700만명, 미국의 100만명, 영국의 2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이 2차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⁶⁸⁾

중국 정부는 또 하얼빈 외곽에 있던 구 관동군이 인체실험 등을 통해 세균병기를 개발하던 구 관동군 방역급수부(이른바 ‘731부대’)에 설치되어 있던 ‘731부대전시관(공식명칭은 侵華日軍731細菌部隊罪証陳列館)의 신관을 2015년 8월 15일 완공하여 개관하였다. 이 역시 시진핑 지도하의 중국 정부의 종전 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었다.⁶⁹⁾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난징대학살기념관, 항일전쟁기념관, 731부대전시관 등의 건립과 확장은 당연히 안으로는 중국 국민들의 애국주의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일본의 우경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1994년 『애국주의교육실시요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종 박물관, 기념관, 열사기념 건조물, 혁명전쟁 중의 중요한 전투 기념물, 중요 문화재, 역사유적, 경승지 등이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장소, 즉 ‘애국주의교육기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애국주의교육모범기지 100곳이 선정되었는데,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난징대학살기념관, 731부대전시관 등은 당연히 이에 포함되었다.⁷⁰⁾

67) 이안 부루마, 앞의 책, 158면.

68) 세계일보, 「“2차대전 핵심 역할” 국제 여론전… 對日 역사공정 나섰다.」, 2015.7.12.

69) 長崎新聞, 「731部隊, 新館オープン」, 2015.8.15.

70) 애국주의교육의 내용은 1)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교육, 2)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3)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의 성과에 대한 교육, 4)중국의 국정(國情)에 대한 교육, 5)사회주의

중국측은 난징대학살 당시 약 30만 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에서 펴낸 『난징대학살도록』의 서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1937년 말부터 1938년 초에 걸쳐 발생한 난징대학살은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이며, 인류문명사상의 대참화였다.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은 중국인의 인권은 전연 염두에 두지 않고, 중국인의 생명, 재산, 생존, 생활 등 기본적인 욕구를 마구 유린하고, 6주간 동안 무장이 해제된 중국의 병사와 많은 부인, 노인, 어린아이들도 포함한 죄 없는 시민을 30만 명 이상 학살하였다. 게다가 같은 시간 내에 난징 시내에서는 일본군이 일으킨 부녀 폭행사건이 2만여 건에 달하였고, 3할이 넘는 시내의 건물도 불에 탔다.⁷¹⁾

난징대학살 기념관 앞에는 ‘300,000’이라는 숫자가 여러 곳에 쓰여 있다. 이 숫자는 마치 난징대학살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처럼 보인다. 이 숫자는 1946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주도한 난징군사법정에서 전범 재판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일본군 6사단장 등 4명이 기소되어 모두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는데, 희생자 수는 3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난징대학살의 희생자는 30만 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난징사건의 희생자를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일본측 연구자들은 최대 상한선을 20만 명으로 잡고 있고, 4만 명설, 2만 명설 등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인 학자들로 구성된 난징사건조사연구회에서는 대체로 ‘10만 이상’설을 주장하고 있다. 중일역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한 일본측 학자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설이 나오게 된 것은 ‘학살’의 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기간, 매장기록, 인구통계 등에서 학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들은 난징에서의 학살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사변’이었기 때문에 일본측에 포로의 취급에 관한 지침이나 점령 후의 주민 보호를 포함한 군정의 계획이 없었던 점, 군기를 단속할 헌병의 수가 적었던 점, 식량이나 물자 보급을 무시한 난징 공략이 감행된 결과,

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제에 대한 교육, 6) 국방과 국가의 안전에 대한 교육, 7) 민족의 단결에 대한 교육, 8) 평화적 통일, 1국 2제도의 방침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岡村志嘉子, 『中国の愛国主義教育に関する諸規定』, 『国立国会図書館 レファレンス』 2004년 12월호 (일본국회도서관, 2004) 참조.

71) 朱成山 監修, 『まえがき』, 『南京大屠殺圖録』(일본어판)(五州傳播出版社, 2005).

약탈행위가 일어났고, 그것이 군기 이완을 가져와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⁷²⁾

그런데 일본의 보수우파들은 난징의 군사, 시민의 희생은 난징 공략전투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이를 ‘학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역사수정주의자들이 만든 후소사 교과서에서는 일본군의 난징 점령 시 “일본군에 의해서 민중들에게도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라고만 서술하였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은 “난징대학살은 없었다. 난징사건의 중국인 희생자 수는 중국측이 말하는 30만도,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채용하는 십 수 만에서 20만도 아니며, ‘최대한 만 명’으로 일반 시민 사상자는 안전구 국제위원회의 보고가 옳다고 해도 47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⁷³⁾ 이와 같은 인식은 역사수정주의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이안 부루마는 “독일인들이 홀로코스트를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난징학살을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난징학살은 어느 전쟁이나 있게 마련인 군사적 살육일 뿐이다.”라고 전한다.⁷⁴⁾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난징대학살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일본 보수우파 사이에는 서로 다른 집단기억들이 존재하고, 이들 집단기억들은 서로 갈등을 빚으며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갈등의 초점이 되고 있는 희생자 숫자의 문제는 2006~2008년 사이 중일역사공동위원회 제1기 회의에 참여한 일본인 학자들이 지적한대로 ‘학살’의 정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기간, 매장기록, 인구통계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또 이미 일본측 학자들이 구성한 난징사건조사연구회에서 ‘10만 이상’설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희생자 수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는 어느 정도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 일본측 학자들은 중일역사공동위원회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되면서 중국측의 지적을 수용하여 ‘난징사건’이라는 명칭 대신 ‘난징학살사건’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다. 이 회의에 참여한 이들은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1)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자료의 수집과 검토가 우선 필요하고, 2) 중일 양측 학자들의

72) 日中歴史共同研究 第1期 『日中歴史共同研究 第1期 報告書』 第2章 「日中戦争—日本軍の侵略と中国の抗戦」(波多野澄雄 庄司潤一郎 집필)(간행기관 미상, 2010), 7면.

73) 다카하시 데즈야,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이규수 옮김(역사비평사, 2000), 138면.

74) 이안 부루마, 앞의 책, 200면.

논의의 기회를 더 늘릴 필요가 있으며, 3) 학자들의 공동연구의 성과를 대중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⁷⁵⁾ 앞으로 중일 양측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간다면 양측간의 의견 차이는 상당히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념행사들을 가졌다. 중국과 타이완은 전승절 기념행사를, 한국은 광복절 기념행사를, 그리고 일본은 전몰자 추모행사를 각각 가졌다. 특히 중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열병식을 갖는 등, 과거와는 다른 대규모 기념행사를 가졌다. 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전후 70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담화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였지만 그 반성과 사죄는 과거형으로서, 그동안 사죄와 반성을 표시해온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을 표명한 것이었다. 또 전쟁기 일본인들의 희생, 그리고 전쟁 상대국의 희생은 언급하였지만, 한국인으로서 징병, 징용,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세계의 평화와 번영, 인권 등을 위해 일본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 아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그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란 실은 군사력의 강화,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대외 영향력의 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아베의 담화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한국과 타이완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역시 일본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 한국, 타이완의 언론들은 대체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일본 안에서도 우파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좌파는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지만, 동아시아 각국, 혹은 사회집단의 이 전쟁에 대한 인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근대 이후의 여러 전쟁에 대한 각 나라, 혹은 사회집단의 기억은 아직 보편타당성을 지닌 기억으로

75) 張連紅, 『學術對話: 日中歴史共同研究における南京大虐殺』, 『立命館經濟學』 제61권 제3호(立命館大学, 2012.9), 18~26면.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인들의 전쟁에 대한 집단기억의 차이는 전쟁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1)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의 성격에 대한 인식, 2) 전쟁책임과 전후책임,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 3) 난징대학살의 진상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아사히신문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일본인들 가운데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었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이가 45%, 반대하는 이가 33%를 점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화가 더 진행된다면 이 수치는 역전될 수도 있다. 또 전쟁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다수 대중들은 전쟁의 책임은 일부 군부에 있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자신들은 군부가 이끈 '무모한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을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통하여 타국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전쟁책임론'이다. 이들은 당시 권력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전쟁 책임의 질과 크기가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전후 세대도 직접적인 전쟁책임이 있지는 않지만, '전후 책임'을 완수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와 같은 전쟁책임론이나 전후책임론을 말하는 이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중일전쟁기의 전쟁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난징학살 사건이었다. 중국에서는 사망자를 30만까지 추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최대 만 명 정도로 보는 등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매우 컸다. 그러나 2006년 이래 열린 중일역사공동위원회의 회의에서 양측 연구자들은 사망자의 커다란 차이가 학살의 정의, 대상지역, 기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향후 양측 학자들이 보다 활발한 상호교류를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아시아에서 역사, 특히 전쟁을 둘러싼 국가 혹은 사회집단의 집단기억 간의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보편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지 않은 담론이나 집단기억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따라서 결국은 인권, 자유, 민주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에 입각한 담론과 집단기억이 보다 우세하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보편적인 역사관 위

에서 구체적인 실증작업을 통해 집단기억, 더 나아가 역사서술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綴縞厚(고케츠 아츠시), 『私たちの戦争責任』, 凱風社, 2009.
- 成田龍一(나리타 류이치), 『近現代日本史』(中公新書 2150), 中央公論新社, 2012.
- 다카하시 테츠야, 『역사/수정주의』, 김성혜 옮김, 푸른역사, 2015.
- _____, 『일본의 전후책임을 묻는다』, 이규수 옮김, 역사비평사, 2000.
- 동북아역사재단편, 『무리아마 총리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2015.
- 스즈키 유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젠더』, 이성순·한예린 옮김, 나남, 2015.
- 朱成山 監修, 『南京大虐殺圖録』(일본어판), 五州傳播出版社, 2005.
- 타나카 히로시 외, 『기억과 망각』, 이규수 옮김, 삼인, 2000.
- 후지와라 기이치, 『전쟁을 기억한다』, 이숙중 옮김, 일조각, 2003.
- NHK取材班編著, 『日本人はなぜ戦争へと向かったのか』上・下, NHK出版, 2011.
- 岡村志嘉子, 「中国の愛国主義教育に関する諸規定」, 『国立国会図書館 レファレンス』2004년 12월호, 일본국회도서관, 2004.
- 오경환, 「집단기억과 역사: 집단기억의 역사적 작용」, 『아태쟁점과 연구』2007년 가을, 한양대 아태연구소, 2007.
- 이안 부루마,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정용환 옮김, 한겨레신문사, 1994.
- 이재원, 『프랑스 역사교과서의 1,2차 대전과 식민지 전쟁의 기억과 전수』,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 이화진, 「'극장국가'로서 제1공화국과 기념의 균열」,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 張連紅, 「學術對話: 日中歴史共同研究における南京大虐殺」, 『立命館經濟學』제61권 제3호, 立命館大学, 2012.9.
- 전진성, 「역사와 기억: '기억의 터'에 대한 최근 독일에서의 논의」, 『서양사론』 72, 서양사학회, 2002.
- _____,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5.
- 최호근, 「독일과 일본의 2차대전 기억문화」,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Commemoration and Collective Memory of World War II in East Asia

Park, Chan-seung*

As 2015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numerous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in countries of East Asia. ‘Commemoration’ refers to the symbolic act of creating a homogeneous time-space for a community and a communal contemporaneity through the representation of a ‘collective memory.’ The V-day celebrations of China and Taiwan,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war dead in Japan, the Liberation Day ceremonies of Korea are all geared toward the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of collective memories. The differences among these events chiefly lie in the attitudes toward war.

In August of 2015,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gave a statement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ar. Although his statement included words such as ‘remorse’ and ‘apology’ for the past war, they were of the past tense, simply reiterating the position of the previous cabinets. While the damage and suffering incurred by the people of Japan as well as the countries that fought against Japan were described, not a word was said about the Korean men who had been conscripted into the war, or of the Korean women who had been used as comfort women for the Japanese soldiers.

The statement by Abe has drawn various responses. The responses by the media and intellectuals within Japan as well as those of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have demonstrated clearly the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past colonial rule and

*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aggressive war by Japan. And these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are intricately linked with differences in the memory of war, particularly collective memory of war.

The differences in the collective memory of war are easily recognizable in the discorda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Asia-Pacific War, war and post-war responsibility, and the truth of Nanking Massacre. Each East Asian country has its conservatives, progressives and moderates, each with a different stance toward the above issues. And they are fiercely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to create a memory that is favorable to their own stance, and furthermore to turn it into the collective memory of their society, that is, history.

The ongoing conflicts among various groups in East Asia surrounding history, particularly war memory, are unlikely to subside in the near future. However, with the progression of globalization, discourses and collective memories that are not founded on universal values are increasingly being discredited.

Keyword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commemoration, collective memory, Shinzo Abe's statement, Nanking Massacre.